

“이재명-조폭 유착관계 증명할 사진·진술서 나왔다”

김용판, 경기도 국감서 주장... 제보자 전달 현금 봉치 사진도 공개
李 “그랬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반박

〈1면에서 계속〉 김 의원은 박철민 씨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현금 봉치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박철민 씨는 5만원과 1만원짜리 현금봉치 5000만원을 이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찾집에서 얘기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며 “박철민 씨 친구라는 장모씨 역시 5만원과 1만원짜리 지폐 현금 약 1억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쥘 것이다”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아니라 국제마피아와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익제보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질의 도중 몇 번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

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아수라’를 틀며 “(그분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에프시(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안하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누노말이다.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것이다”고 대응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도지사 당선 후 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제공

러 산하기관 중 유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가장 먼저 임명했던 점, 유 전 본부장의 석사논문에서 이 후보에 대한 감사 인사가 나오는 점 등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했는데 측근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사면 관련 질문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어떻게 부패 사범을 사면하느냐”고 말했으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실형에 대한 질의에도 “엄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관련 특검 도입을 두고도 대립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도입과 관련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검 도입을 제안하자 이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는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을 나눠 가진 사람이 도둑이 분명한데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저는 검경,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이재명 대선공약 홍보용 국회 토론회에 혈세 투입

김은혜 “비용도 예산서 총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토론회를 대선공약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경기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내부공문에 따르면 6월 경기도 주최로 국회 근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본금융 관련 토론회의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호텔 대관료 360만원 △기념사진을 위한 포토월 95만원 △포스터와 플래카드 150만원 △자료집 발간 300만원 등이었다. 또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발제자 2명에게 각 50만원, 토론자 3명에게 각 3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경기도 경제실장 전경로 처리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재명캠프 핵심참모들인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마찬가지로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본주택’ 토론회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전경로 처리됐다. 이재명캠프 핵심참모 위주의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도 직접 참석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며 기본주택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 의제를 내세웠다.

경기도가 한 참석자 질의에 회신한 이메일을 보면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의 하나”며 이후보의 대선 공약을 직접 언급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공무원까지 투입돼 여의도 일대에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를 하고 중앙부처에 홍보하는 일을 맡았다. 5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공공과 세 실현’ 토론회도 비슷한 형태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도지사로서 보유한 행정 네트워크와 방대한 도 예산·홍보 조직 등 지사 프리미엄을 극대화해 자신의 대선 행보에 활용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강재영 기자

野 “백현지구도 李 측근에 특혜 준 정황”

〈이재명〉

유승민 ‘백현지구 호텔사업’ 협력사 수의계약 의혹 제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촉발된 개발특혜 의혹이 전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성남시의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인 백현지구에서도 대장동 사태와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저희 캠프에서 확인한 결과 백현지구 역시 유사 방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준 정황이 발견됐다”며 “측근” 당사자로 안태준 전 성남산업진흥원(진흥원) 전 이사를 지목했다.

유 전 의원에 의하면 안 전 이사는 이재

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3년 진흥원 이사에 임명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공)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이사에 임명된 후 성남시는 백현지구 시유지에 호텔개발 연구용역 및 호텔사업 시행을 각각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그런데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이사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 소재지 주소도 같았다. 수의계약 당시 안 전 이사는 ㈜베지츠종합개발 협력사인 ㈜유엔피 사내이사 맡고 있었다. 유 전 의원은 “하필 성남시 산하기관 등기이사로 제직된 시기와 시정 주도 호텔건설 협력사 등기이사(재직) 시기가 맞물리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이사의 2019년 8월 경기도공

북부분부장 취임 당시도 ㈜유엔피 근무기간과 겹친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안 전 이사의 수상한 경력과 협력사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이뤄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이 지사와 안 전 이사 개입 여부, 뇌물수수 여부 등을 신속하고 과감히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현지구 의혹은 1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백현종 의원(구리·국민의힘)이 첫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해당 지역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성남시가 사업자를 유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신병을 18일 확보해

조사에 돌입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은 진실을 안다”며 폭로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여야에서는 대장동 사태 ‘몸통’ 의혹의 이 지사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성명에서 “이재용은 영장 청구 두 번만에, 우병우는 세 번만에 구속됐다. 적폐수사는 지옥까지 쫓아가고 여당 대선후보 수사는 변죽만 울리다 끝낼 건가”라며 “성남시 교문변호사였던 김 총장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운현 전 이낙연캠프 공보단장은 지난 15일 SNS에서 “진실로 그(이) 지사는 못하는 게 많다. 거짓말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나라든 기꺼이 팔아먹을 사람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의혹을 부인 중이다.

오주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의플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3일 성남시민연대·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주최로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어보고 있다. 남홍수 기자

“화천대유, 압수수색 전 성남의플 회의록 폐기” 의혹 제기

성남의플 대표, 최근 지인에 언급 野 “성남도공 신속히 공개하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플 대표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성남의플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재환 성남의플 대표와 성남군대 법대 동문인 변호사 A씨에 따르면 고 대표는 14일 A씨와 20여분 간 통화하면서 ‘성남의플 자산관리사(AMC)인 화천대유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성남의플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사무실 컴퓨터도 교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료 삭제 얘기를 화천대유 측에서 들었다.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기에 관련 자료도 화천대유가 모두 관리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 씨가 당시 통화에서 ‘성남의플 이사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자주 참

석하며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는 누군지 몰랐는데 최근 언론에 나오는 얼굴을 보니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성남도공은 성남의플에 우선주 50%+1주를 보유한 공공부문 파트너로 참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 16일만인 9월29일에야 화천대유 본사, 성남도공,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성남의플에 이어 성남시청에 대해서도 수사팀 구성 2주만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과 A씨 증언 등을 두고 의혹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조작 시간을 검찰이 벌여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회의록에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공 관계자들이 ‘화천대유 이익 몰아주기’에 동조한 정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해당 회의록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진상을 파악할 증거로 여겨져 왔다. 화천대유·성남도공 등은 성남시의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비밀유지 의무 위배 시 법적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거부해 왔다.

뉴스드립

이재명, ‘조폭 유착설’에 웃음... “몰타기” “두리몽실 답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으로부터 20여명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해당 질의를 할 때 이 지사는 몇 번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용이 재미있는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는 말은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는 뜻 같은데 (수사하면) 쉽게 확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몰타기”, “대통령 언젠가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dao3*** 질문하면 꼭 다른 사건 끌어다 비유를 하고 몰타기 하면서 말장난 하듯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작 그렇다면 특검 하자니까 또 두리몽실 대답하면서 특검은 안한다.

kch2*** 조폭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닌가요? 본인의 입장이 불리하면 면책특권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인가? 국회의원 질문에 헛웃음 짓는게 답변자의 태도인가?

0926*** 저기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안되실 거 같어요

이인영 “대북백신지원, 국민공감대 있어”... “북한주민 공감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 백신지원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북한주민 공감대”, “누가 공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fcc*** 국민 공감대? 아~ 북한주민의 공감대.

sun*** 이런 제정신이 아닌? 어느 국민이 공감했다고 헛소리할?

seup*** 어느국민이 공감하나 공감한다면 비정상이지

고 대표는 A씨 증언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성남의플 이사회 회의록 삭제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없다. 회의록은 성남도공·성남의플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폐기할 이유도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회의록 사본이라도 공개할 것을 끝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경기수출진흥청을 항의방문하고 회의록을 포함한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전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사태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 대장동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 또는 사생활 사안이라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 등과 함께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주환 기자